

지방정부 정책&이슈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구축과 추진을 위한 쟁점과 과제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



## I. 시작하는 글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고등교육 정책체계에 지역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핵심적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사업의 관리·운영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RISE의 내용과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RISE 자체의 속성 또는 실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논의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RISE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은 재원의 조달과 지원 방식,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그리고 통합적 관리·운영 체계의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 II. RISE의 내용과 경과

### 1. RISE 개요

#### 1) 배경과 목적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급히 변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 쇠퇴가 빨라지는 문제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특히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의 문제 중에서 대학의 쇠퇴는 지역발전의 핵심이 약화되는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대학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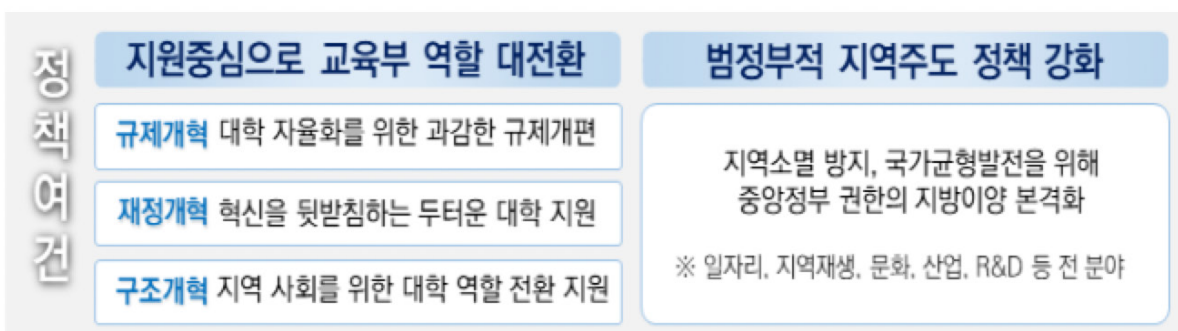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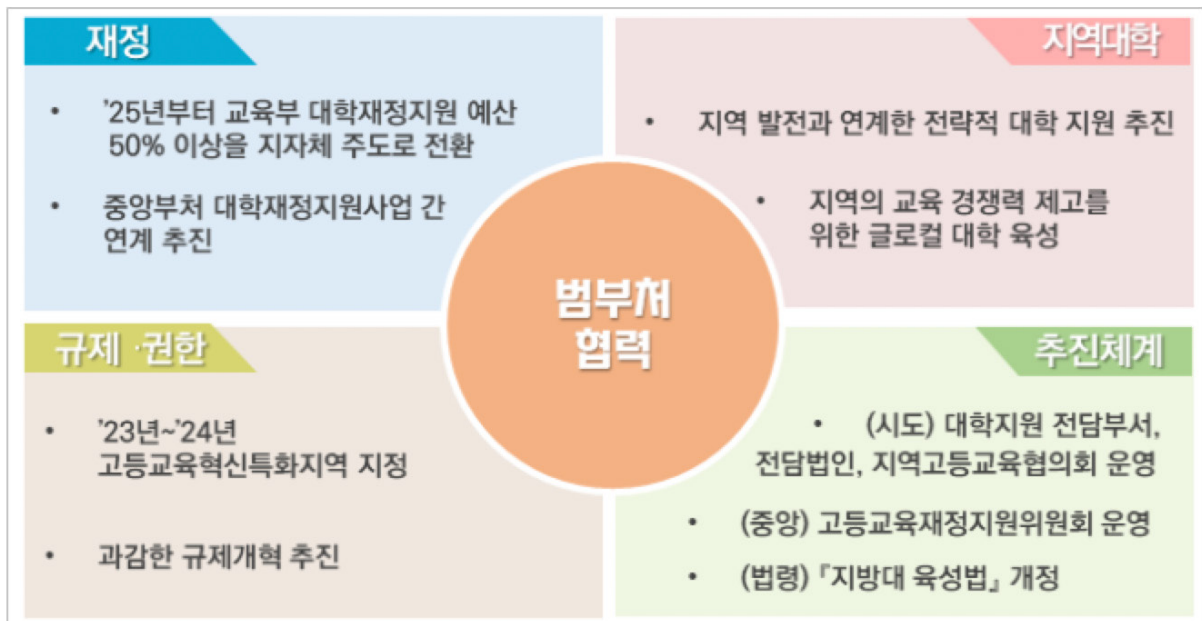
비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지역이 키우는 대학”  
**+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자료 : 교육부(2023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 2) RISE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체계

RISE는 지역인재양성부터 취업과 창업 그리고 정주를 아우르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2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목표는 대학이 지역을 살린다는 것으로서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둘째 목표는 지역이 대학을 키운다는 목표로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이다.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부처 협력이다. 범부처 협력에 기반하여 4개 전략을 활용한다. 우선, 재정전략으로는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대학30개를 육성한다. 그리고 고등교육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시·도 RISE센터 설립, 지역고등교육 협의회 등을 설립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2. RISE의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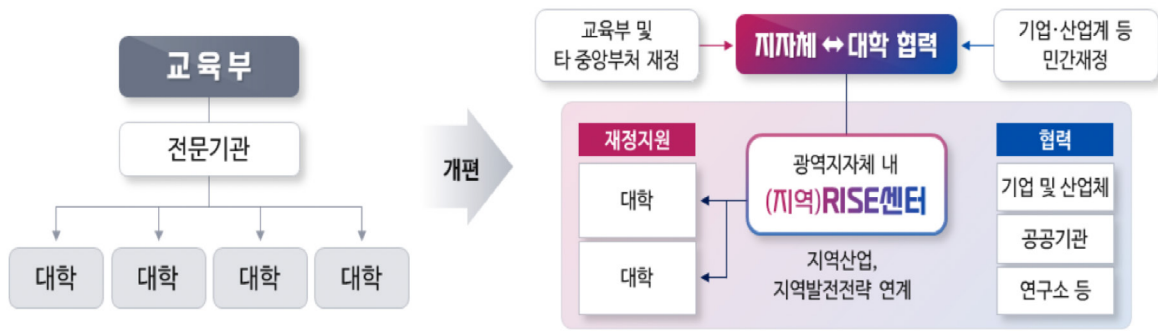
### 1) 재정 : 지방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지역인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한다. 교육부는 지방정부(시·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 형태의 RISE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관련 재정사업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교육부(2023a)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인 2조원 이상을 RISE 체계에서 운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ISE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지방대학활성화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도에는 7개 시·도에서 RISE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에는 10개 시·도도 RISE 센터를 설립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RIS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이기는 하지만,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위에서 제시한 5개 재정사업 약1.2조 원 정도를 RISE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부b, 2023).

교육부는 RISE 예산을 중앙 RISE 센터(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시·도의 RISE 센터에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1.2조 원의 RISE 예산을 배분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시·도별로 배분한다. 산정방식과 배분기준 등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2> RISE 체계와 재정지원방식



자료 : 교육부(2023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 2) 지역대학 :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발전계획과 대학특성화 분야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교육부a, 2023).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특구 등 특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3>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자료 : 교육부(2023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 3) 규제개혁 : 대학자율 확대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확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을 지방대육성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RISE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규제특례를 심의하는 경우에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의 사례로는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 확대(겸임교원의 학기 단위 임용 및 별도(특별) 채용 절차의 허용,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의 완화 등 학사 운영의 자율화 그리고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교육부, 2021b; 교육부, 2023a).

<표-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 사례	
분야	주요 내용
교직원 인사	• 겸임교원 학기 단위 임용, 별도채용 절차(특별채용) 허용 등
학사 운영	•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 완화, 국내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학점기준 완화 등
타부처 관련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인근 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 운영 허용,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학과의 이동수업 거리 제한 예외 등

자료 : 교육부(2023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또한 교육부령이나 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간다고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3a).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적인 규제들을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대학관련 걸림돌 규제들을 발굴하여 혁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의 재산관리, 대학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 대학 내 옥외광고물 설치 등과 관련 규제들을 대폭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4) 추진체계 :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

시·도에 대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는 평생교육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들은 이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RISE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전담부서의 역할은 지역 내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자율운용이 가능한 정원과 조직의 범위 내에서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적절한 조직 형태 및 인력의 규모를 산출하여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RISE의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별로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전담기관들은 지역 주도의 RISE 사업의 기획 및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 등의 집행관리, 참여기관의 선정과 성과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상응하여 교육부는 중앙 RISE 센터를 신설하여, 사업의 컨설팅, 재정사업의 선정과 평가, 국비 교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교육부a, 2023).

지역에는 고등교육 또는 대학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RISE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도별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료 : 교육부(2023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 III. RISE 추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 1. RISE 재원의 조달과 지원 방식

RISE가 지방 주도로 추진된다는 정책방향은 선언적 수준에서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ISE를 추진할 시·도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운영계획에서 2025년부터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재정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RISE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마련하여 공개한 상황은 아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 사업(HiVE) 등의 예산을 RISE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되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이상까지 시행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는 각각의 사업을 중단하여 새로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미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들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시·도가 사업과 재원 활용방안 등을 계획하여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정도로는 시·도별 재원 규모가 변할 수 있고, 재원 배분의 기준 및 그 결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받는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쟁점이 된다. 교육부는 중앙RISE센터를 통해 시도 RISE센터에 국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도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책임과 자율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설정된 포괄보조금(block grant)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년부터 RISE 예산으로 통합되어 일정 규모의 재원(약 1.5조원 내외)이 배분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포괄보조금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 출연금의 형태는 중앙부처가 정한 배분방식에 근거하여 할당된 금액이 시도별로 배정되고, 시·도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소극적 대응에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다르게 포괄보조금 방식을 활용할 경우, 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지역 내 대학들과 연대하여 지역 고등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시·도 정



부가 고등·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세대와 학령인구 변화 그리고 교육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RISE 체계에 포함할 재정사업을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과 관련된 다른 중앙부처의 재정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지원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일자리와 고용관련 재정사업들을 RISE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현장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RISE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RISE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4가지 쟁점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RISE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대학의 관리 또는 고등교육정책의 권한은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 정부가 해당 지역의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을 스스로 계획하고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가 된다. 특히 시·도가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RISE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도 정부가 RISE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도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고등평생교육 재정사업 패키지를 구상하고, 대학과 유관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RISE 센터를 넘어 시·도 본청이 관련 권한과 기능을 보유하고 시·도 의회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해단 체계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에서 역량과 협력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역량과 경험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정부는 그러한 지적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순환배치에 따른 전문성 약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시·도 RISE 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RISE 센터는 시도 연구원, 테크노파크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아직은 시범사업 기간

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배정하고 독립된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RISE 체계가 정립되고 재정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시·도의 고등교육기관 현황, 산업경제 등 인력수요 분야 및 4대 특구 등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RISE 센터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RISE 센터의 인력구성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 산업, 연구개발 및 중등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을 통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대학들을 조율하는 리더십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중앙 RISE 센터와 시·도 RISE 센터 사이의 협력과 연대도 중요하다. 중앙 RISE 센터는 통제와 관리 역할이 아닌 조정과 지원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RISE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며, 발전이 필요한 지역과 부문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통합적 관리·운영지원 체계의 정비

RISE가 지역에 안착하여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쟁점과 과제로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RISE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도의 경우, 전담부서의 설립과 RISE 센터의 설립은 새로운 인력과 재정 수요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서와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의 확충과 기준인건비의 확대 반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사전적 협의와 준비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사업과 예산)의 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리시스템도 준비되어야 한다. 개별 시도가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의 통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호환가능하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이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RISE 체계의 구축과 사업의 운영은 교육부와 시·도 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앙과 지방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RISE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 IV. 맺는 글

RISE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변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RISE가 고등교육정책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시·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정부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운영 권한의 확대 정도는 “지방시대”를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시·도 정부는 더 큰 숙제를 가지게 되었다.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꾸려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성과를 만들어 내며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스스로 만들고 증명해야 한다. 다양한 쟁점이 있고, 충분하지 않은 정도의 권한과 재정이 부여된 상황이지만 성과를 나타내어 보다 많고 큰 권한과 재원을 책임지고 운용하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참고1] 3차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 1. 3차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3.0)의 지원 유형

2022년 시작된 제3차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은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공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 유형은 일반대는 ‘기술혁신 선도형,’ ‘수요맞춤 성장형,’ 및 ‘협력기반 구축형’ 등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전문대는 ‘수요맞춤 성장형’과 ‘협력기반 구축형’ 등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4,070억 원(2022년)이며, 선정평가를 거쳐 일반대 75개교 내외 그리고 전문대 59개교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 2. 지원유형별 지원 현황

#### 1) 기술혁신선도형

산학연협력 기술혁신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총 15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고, 학교당 55억원을 지원한다. 이 유형에서는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며, 이후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개교 내외를 선정한다(55억 x 15 = 825억원).

<그림-5>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지원 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선	산학협력 분야·범위 확대 및 다양화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공유 생태계 조성	
일반대	기술혁신형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기술혁신 선도형	• 신기술 고급인재 양성 및 R&D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 혁신 지원
	현장밀착형			수요맞춤 성장형	•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및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전문대	산학협력선도형			협력기반 구축형	• 산학협력 기반 조성 촉진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현장실습집중형			수요맞춤 성장형	• 전문기술인 양성체계 고도화 및 애로기술 자문 등 기업지원 대응 강화
				협력기반 구축형	•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도입 및 채용 연계 기반 실용기술인 양성

자료 : 교육부(2021a).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방향(안) 등 재정리.

2022년부터 LINC3.0의 기술혁신 선도형 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6개 대학(수도권 :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충청권 2개 대학(충남대, 충북대), 호남제주권 2개대(전남대, 전북대), 대경강원권 3개 대학(강원대, 경북대, 포항공과대) 및 동남권 3개 대학(부산대, 부경대, 경상국립대) 등이다.

## 2) 수요맞춤성장형

산업계 및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총 5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고, 학교당 40억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유형의 재정지원액은 2,000억원이 된다.

본 유형은 권역단위 평가로 권역별로 각 8개교 내외, 총 40개교 정도를 선정하며, 이후 권역단위 선정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도권 19개, 호남제주권 11개, 대경강원권 15개, 충청권 12개, 동남권 11개 대학이 지원하였다.

## 3) 협력기반구축형

협력기반구축형은 산학협력 기반 조성 및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총 1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고 학교당 20억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유형의 재정지원액은 200억원이 된다.

본 유형은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0개교 내외를 일괄 선정하며, 유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1~2차 LINC 전체 사업기간(2012~2021, 총 10년) 동안 연속하여 참여한 대학의 신청은 제한하고 있다.

### 3. 유형별 선정 현황

#### 1) 일반대

유형	구분	대학명
기술혁신 선도형 (13개교)	수도권(3개교)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지방(10개교)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수요맞춤 성장형 (53개교)	수도권 (12개교)	가톨릭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ERICA캠퍼스
	충청권 (10개교)	건양대, 대전대, 선문대, 순천향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호남제주권 (9개교)	광주대, 동신대, 목포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대경강원권 (12개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과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남대, 한동대, 한림대
	동남권 (10개교)	경남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협력기반 구축형 (10개교)	수도권(2개교)	숙명여자대, 인천대
	지방(8개교)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주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목원대, 목포해양대, 신라대, 우송대, 위덕대

자료 : 나무위키. 2023년 11월 10일 검색.

#### 2) 전문대

권역	수요맞춤성장형 (44개교)	협력기반구축형 (15개교)
수도권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경북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양미래대, 연성대, 오산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한양여자대	명지전문대학, 안산대, 인덕대
충청강원권	대전과학기술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우송정보대학, 충북보건과학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가톨릭상지대,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군장대, 대전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목포과학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 춘해보건대
호남제주권	순천제일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조선이공대	
대구경북권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안동과학대, 영진전문대	
동남권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연암공과대, 울산과학대	

자료 : 나무위키. 2023년 11월 10일 검색.

## [참고 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 1. 개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HiVE 사업)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다. 지역 내 특화분야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소재지) 간의 컨소시엄이 된다. HiVE의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지역별 공간은 권역이 되며,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5개 권역은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등을 지칭하며, 각 권역에 소재한 대학 및 지자체 간 컨소시엄의 구성이 원칙이다. 다만 권역 밖 지자체라도 시·군·구 경계가 대학 소재지 지자체와 인접하고 해당 지역에 전문대학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권역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나의 컨소시엄에는 최대 3개의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2개 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HiVE사업은 2022년에 30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선정 당시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년간이다. 컨소시엄당 지원예산은 15억원이며, 이는 대체로 국비 90%와 지방비 10%로 구성된다. 이에 국비 405억원과 지방비 45억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대학으로 교부하여 사업관리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사업관리비는 별도로 편성한다(교육부, 2022).

**지원대상**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소재지) 간 컨소시엄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총 사업비 15억원 내외[총 450억원(국비 405억원 + 지방비 45억원)]

**사업권역 및 선정규모** 총 30개 컨소시엄(권역별 6개)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6개	6개	6개	6개	6개

자료 : 교육부(202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등 재정리.

## 2. 주요 사업

### 1) 청년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

청년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 사업은 직업교육 멘토링이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사업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정주 인프라에 해당하는 주거·교통·취업인프라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연간 1조 원, 총 10년간 10조 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며, 행정안전부가 기획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집행관리를 맡고 있다(교육부, 2022).

### 2) 지자체 연계 평생직업교육 저변 확대

지방 연계 평생직업교육 저변 확대 사업은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전문대학을 활용하여 신중장년의 인생다모작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직업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교육부, 2022). 신중장년이란 조기 은퇴자 및 정년 퇴직자 등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일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재교육이 부족하고 재취업 기관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50~64세)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신중년은 평균 72세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통계청, 2020).

## 3. HiVE사업 선정 컨소시엄 현황

2022년 9월, 5개 권역별로 선정된 각각 6개 컨소시엄, 총 30개 컨소시엄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13곳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은 3개에 해당된다.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및 호남제주권에서 선정된 컨소시엄은 다음 표와 같다(나무위키, 2023).



<표-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선정 컨소시엄 현황

권역	컨소시엄	
수도권 (6개교)	① 경민대-의정부시 ③ 동서울대(신구대)-성남시 ⑤ 서정대-양주시(연천군 <b>감소</b> )	② 대림대(연성대)-안양시 ④ 동양미래대-서울 구로구 ⑥ 오산대-오산시
충청강원권 (6개교)	① 강릉영동대-강릉시 <b>관심</b> ③ 충청대(충북보건과학대)-청주시 ⑤ 한림성심대-춘천시(홍천군 <b>감소</b> )	② 강원도립대-양양군 <b>감소</b> (고성군 <b>감소</b> ) ④ 한국영상대-세종특별자치시(공주시 <b>감소</b> ) ⑥ 혜전대-홍성군
대구경북권 (6개교)	① 가톨릭상지대(안동과학대)-안동시 <b>감소</b> ③ 경북전문대-영주시 <b>감소</b> ⑤ 대구보건대(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대구 북구	② 경북보건대(경북과학대)-김천시 <b>관심</b> ④ 계명문화대-대구 달서구 ⑥ 영남이공대-대구 남구 <b>감소</b>
부산울산경남권 (6개교)	① 거제대-거제시 ③ 김해대-김해시 ⑤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울산 남구	② 경남정보대-부산 사상구 ④ 부산경상대-부산 연제구 ⑥ 한국승강기대(경남도립거창대)-거창군 <b>감소</b>
호남제주권 (6개교)	① 광주보건대-광주 서구 ③ 목포과학대-목포시(신안군 <b>감소</b> ) ⑤ 전남과학대-곡성군 <b>감소</b>	② 동아보건대-영암군 <b>감소</b> ④ 원광보건대-익산시 <b>관심</b> ⑥ 전북과학대-정읍시 <b>감소</b>

자료 : 나무위키. 2023년 11월 10일 검색.

## 참고문헌

교육부(2021a).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추진방향(안).

교육부(2021b).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1-24호.

교육부(202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2023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교육부(2023b).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2023년 9월 29일 보도자료.